

# “19~49세 3분기부터 백신 1차 접종...오늘 당정서 상황 보고”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별도 시스템 구축 일부 기관 백신 ‘로비’ 의혹에는 “의견 개선”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권장 대상자가 아닌 19~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예방접종 일정과 백신·치료제 개발 및 확보 현황 등은 14일 당정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이선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3분기에 많은 (백신)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19~49세 성인들도 그때엔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 접종을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이 한 세트”라며 “1차 접종은 2회 접종 중 첫 번째 접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5600만명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중 의료진, 고령자 등 고위험군 등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이르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우선 순위가 있는 분들이 맞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며 “가급적 접종할 때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정보를 연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 예정인 백신 중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백신으로, 보관과 운송 중 냉동시스템이 필요하고 접종을 위해선 별도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냉동이 아닌 냉장 보관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접종 대상자에 따라 사용



될 백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과장은 “입상 결과와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분들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선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4일 당정회의 안건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및 확보 현황, 백신 접종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일단 (당정회의 내용)발표는 계획 중”이라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계획 발표는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도 취학 전후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나라 갈 때도 예방접종 이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발급 시스템이다”라며 “코로나19 접종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별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여러과의 연계는 아니지만 요구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로비는 아니고 의견 개선”이라며 “공문이나 공식적 경로를 통한 의견 접수라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을 요청했다.

이 과장은 “예방접종 우선순위는 과학적 근거와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근거나 이유로 결정됐는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정부 “설까지 유행 억제해야...개인간 접촉 경계심 풀 때 아냐”

### 1주새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 833명→593명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한 주 사이 833명에서 593명으로 240명가량 줄었지만 감소 속도는 완만하고 여전히 약속·모임

등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유행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

자 수는 593명으로 그 직전 1주에 833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달 7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4153명으로 1일 평균 593.3명이다. 이는 직전 1주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5832명, 하루 평균 833.1명 대비 약 239.8명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 감소 속도는 여전히 완만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선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정부는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반전 추세는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이라며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더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치료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월까지의 최대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유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생업에 큰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를 오는 토요일인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단계는 국내 발생 환자 수 등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신 이와 별도로 6주간의 거리 두기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